



천안함 함미 인양작업이 진행된 15일 백령도 해상에서 함미가 크레인에 의해 올려져 바지선에 실려 있다.

/연합뉴스

### 군사적 조치 고려 첫 언급

#### 김 국방 국회 답변 후 발언 취소

국회 국방위의 지난 14일 전체회의에서는 천안함 침몰사고가 북한의 소행으로 밝혀질 경우에 대한 '군사적 조치'가 처음으로 언급됐다.

한나라당 김장수 의원이 "북한 개입이 확실할 경우 군사적·비군사적 대응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한 데 대해 김태영 국방장관이 "군사적·비군사적 조치를 모두 고려하고 있다"고 답한데 따른 것이다. 김 장관이 "가정 상황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지 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전제를 달긴 했으나 이는 해석하기에 따라 북한에 대한 군사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는 뜻으로도 읽힐 수 있는 대목이다.

이 같은 발언에 한나라당 김동성 의원은 "신중하게 발언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재동을 걸면서 "군사적 조치도 옵션에 포함되느냐"며 재확인에 나섰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공격을 당하는 상황이라면 자위권 차원에서 무력을 행사할 수 있지만 지금은 끝난 상황"이라며 "(군사적 조치에 나설 경우) 도발이 될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김 장관은 "발언을 취소하겠다. 질문에 답한 것인데 '군사적, 비군사적'으로 나눠 표현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물러서면서 "정부가 해야 할 모든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는 말로 답변을 대체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은 군의 '군사적 조치 검토' 필요성을 오히려 역설하면서 김 장관의 입장을 다시 물었다. 유 의원은 "북한의 소행일 경우 외교적·국제법적 검토는 외교부나 통일부에서 하고 국방부는 군사적 제재·응징수단을 검토하는 게 상식적인 나라 아니냐"고 질문을 던졌다.

김 장관은 "그게 국방부의 책무고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는 답을 내놓았다. 또한 유 의원이 "6개월 뒤, 1년 뒤 (북한 개입의) 증거를 찾을 경우 그때 응징·보복한다면 도발이 아닌 정당한 자위권 행사 아니냐"고 다그치자 김 장관은 "의원 말이 옳다"고 답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 北 소행이라도 무력대응 어려워

#### 국제법적 한계 외교적 압박 외 방법 없어

일각에서 천안함 침몰 사고와 북한의 연관성을 제기하는 가운데 설사 북한군의 소행이라는 결론이 나와도 국제법적 한계로 인해 우리 군이 무력대응을 하기는 어렵다는 학계의 지적이 나왔다.

이상현 세종연구소 안보연구실장은 15일 세종연구소 주최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역사적 교훈과 추진방향' 포럼 발표에서 "(천안함 사고가) 북한의 소행으로 밝혀진다 해도 현실적 대응 수단은 마땅치 않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서해상 NLL(북방한계선) 인근에서 새로운 북한의 도발이 발생하지 않는 한 한국이 갑자기 북한을 무력으로 응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북의 도발 발생 즉시 대응하지 않는 한 유엔이 무력행사의 예외로 규정할 '일반적 자위권' 행사 요건에 해당하

는 '현존하는 급박한 위협'이 이미 지난 상태로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실장은 이어 "1967년 한국의 당포항이 북한에 의해 공격을 받아 39명의 해군이 전사했을 때 박정희 대통령이 북한에 군사조치를 취할 것을 주창했으나 미국이 제지한 적이 있다"며 "이듬해 푸에블로호 납치, 1983년 아웅산 폭파 사건 때도 한국은 대북 보복 조치를 주창했지만 외교적 압박 외에는 별다른 수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천안함 침몰 사태의 여파로 남북관계는 당분간 경색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북한이 이 사건의 배후로 의심되는 상황에서 남북대화는 물론 6자회담이나 3차 정상회담 가능성도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합뉴스

### 하푼 미사일·경어뢰 유실 확인

#### 기뢰탐색함 4척 동원 해저 살살이 조사

천안함 함미 인양이 15일 본격 시작되면서 유실된 무기 수거 및 처리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초계함인 천안함에는 함미와 함수 부분에 76mm 주포와 40mm 부포가 각각 2문씩, Mk32 어뢰발사관 6문, 폭뢰 12발, 미국제 함대함 유도탄인 하푼 미사일 4기, 대공 미스트랄 미사일 4기 등이 탑재돼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수면 위로 올라온 천안함을 살펴본 결과 하푼 미사일 2기와 경어뢰 2발이 장착된 어뢰발사관 1문이 유실됐다. 하푼 미사일은 사거리 130km 이상으로 함정을 공격하며 탄두에는 221kg의 고성능 폭약이 장착돼 있다. 어뢰는 대 잠수함용이다. 아직 폭뢰나 미스트랄 미사일, 76mm·40mm 함포탄 4천여발의 유실 여부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유실된 무기가 해저에서 강한 수압을 견디지 못해 폭발하거나 다른 충격에 의해 자체 폭발할 우려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군 당국은 유실된 미사일이나 기뢰는 통제장치의 타격 지시가 없거나 특정 조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터지지 않도록 이중, 삼중의 안전장치가 돼 있다는 점에서 폭발 가능성을 매우 낮게 보고 있다.

따라서 유실된 무기는 사고 해역 바닥에 떨어져 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군은 현재까지 유실 무기 탐사를 위해 기뢰탐색함 4척을 동원해 해저를 살살이 조사하고 있다. 군은 또 사고 방지를 위해 선체를 완전히 인양해 바지선에 안착시키는 대로 탑재된 무기를 제거하고, 선체 부근에서 발견하면 비상대기 중인 폭발물 처리반이 즉시 투입돼 견제·올릴 계획이다. 발견된 폭발물은 상태를 파악한 후 인양하거나 인양이 불가능하면 수중에서 폭발 처리한다. /연합뉴스

### 실종선원 가족 "금양호도 인양해줬으면..."

천안함 함미 인양작업이 이뤄진 15일 오후 인천시 중구 연안동 주민센터. 서해 대청도 해상에서 침몰해 14일째 가라앉아 있는 금양호의 실종선원 가족 8명은 TV로 천안함 인양 장면을 지켜보았다. 실종선원 가족들은 사고 직후인 지난 4일부터 연안동 주민센터 2층을 가족 대기실로 쓰며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금양호 실종자 대책위원장 이원상(43·실종선원 이용상씨 동생)씨는 "천안함 인양이 생각보다 빨리 진척돼 다행이다"라며 "금양호에 대해 해경이 추진 중인 선체 수색은 심해(深海) 잠수 등에 대한 위험 부담이 있어 우리 쪽도 선박을 아예 인양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천안함 인양이 성공했으면 좋겠지만, 그에 비해 금양호 수색작업은 국민 관심 밖으로 밀려난 것 같아 안타깝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 전문가들 “어뢰가 때린 것이 맞다”

## ■ 드러난 절단면...침몰 원인은

### 절단면 외 멀쩡, 내부폭발 가능성 낮아 “선체 아래서 버블제트어뢰 폭발 확실”

15일 인양된 천안함 함미의 절단면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온전하거나 파손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침몰 원인에 더욱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군과 민간 인양팀이 오후 1시14분 바지선으로 옮긴 함미의 모습은 스크류와 선체 밑부분은 온전했지만 하푼 미사일 2기와 경어뢰 2발이 장착된 어뢰발사관 1문 등이 보이지 않았다.

침몰 원인을 규명해줄 절단면은 좌·우현 모두 파괴되어 예상대로 중앙부위 밑에서 강한 충격이 있었을 것으로 군과 전문가들은 추정하고 있다.

선체 좌·우측에 각각 가해진 충격에 의해 선체 철판이 날아가거나 서로 반대 방향으로 밀려났을 가능성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인 만큼 민·군 합동조사단의 정밀조사에서 가려질 것으로 관측된다.

일단 드러난 함미 절단면을 지켜본 전문가들은 외부충격에 의해 사고가

나았 가능성에 더욱 무게를 두고 있다. 함내에서 폭발이 있었다면 폭발 지점 뿐 아니라 그 주변까지 파손되어야 하지만 인양된 함미 상태는 절단면 외에 외관상 파손된 흔적이 없어 일단 내부폭발 가능성은 없다는 것이다.

KAIST 해양시스템공학부 안충승 교수는 “선체 밑에서 외부 충격이 가해졌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절단면의 파손 상태를 봐서 내부폭발에 의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안 교수는 “내부 폭발이라면 폭발지점에서 그 주변까지 파손되어야 한다”면서 “선체를 동상 내려면 중여뢰 이상의 무기가야 하는데, 절단면을 정밀 조사하고 파편을 찾아내 외부 충격의 원인을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체 아래에서 버블제트어뢰가 폭발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구체적인 분석도 나왔다.

윤연 전 해군작전사령관은 “외부

에서 어뢰가 때린 것이 맞다”며 “직주어뢰라면 구멍이 뚫렸겠지만 파손 상태로 미뤄 이보다 발달된 버블제트어뢰가 확실하다. 배의 통로나 바닥에 깔린 초록색 우레탄이 갑판까지 수직으로 파손된 정도라면 어뢰가 맞았다”고 주장했다. 윤 전 사령관은 “기뢰가 터졌다면 왜 한 발만 있었겠느냐”면서 “작전적으로 은밀성과 기습성을 고려하면 기뢰일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안기석 전 해군작전사령관도 “함미 절단면이 좌·우현 모두 타원형 형태로 파손됐다”면서 “어뢰 등 외부에 의한 충격으로 보이는데 어떤 운반수단을 이용했는지는 앞으로 규명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금속 파편을 수거하는데 해군은 모든 역할을 쏟아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동해의 경우 내륙에서 400m까지만 나가도 평균 수심이 1천~1천400m에 달해 도저히 파편을 찾아낼 수 없지만 사고 해상은 서해상으로 수심이 낮고 해저에 모래가 많아 파편을 찾는 것이 수월할 것이라고 군 관계자들은 전하고 있다.

군은 이날부터 수중 잔해물 탐색을 위해 폭발 원점 반경 500m 이내를 정밀 탐색 중이며 무인탐사정인 ‘해미레호’를 투입했다. 민·군 합동조사도 이



날 함미가 탑재될 바지선에 현장조사팀 38명을 투입, 본격적인 조사 활동에 돌입한 상태. 현장조사팀은 군인사 26명과 민간인 10명, 미국 조사요원 2명으로 구성됐으며, 민간은 조영덕 공동조사단장을 비롯해 국립과해조사연구소 요원 2명, 함정구조 전문가 4명, 폭발유형분석 전문가 3명 등이 포함됐다.

이들은 절단면을 중심으로 선체 전반에 대한 정밀영상을 촬영하는 등 선체 절단 원인에 대한 조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해 조만간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연합뉴스

## 실종자 신원 확인 소지품 없을땐

# DNA 채취 유전자 감식

천안함 함미가 15일 인양되면서 지난 스무달 동안 차디찬 바닷물 속에 갇혀 있었던 실종자들이 하나둘씩 사늘한 주검으로 발견되고 있다.

수습된 실종자의 시신은 우선 인근 해역에 머무는 독도함으로 이송돼 신원확인 절차를 거쳐야 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시신 일부가 훼손되거나 소지품이 없는 경우에는 시신의 신원을 확인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 유전자 감식을 통해 신원을 확인한다는 방침에 따라 국방부 조사본부 과학수사연구소의 안희중 유전자과장을 비롯한 유전자감식팀 관계자 일부를 민군 합동조사단 과학조사팀에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필요할 경우 유전자(DNA) 감식을 통해 시신의 신원을 확인할 방침”이라며 “기본적으로 실종자 가족의 DNA를 채취해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시신이나 유류품에서 얻을 수 있는 DNA와 대조하는 작업

을 벌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감식팀 일부는 국방부 조사본부에 남아 있고 다른 일부는 내일 광택 2함대로 이동할 예정”이라며 “광택 2함대에서 DNA 정보를 채취해 서울로 전달하면 이를 토대로 DNA 감식을 통해 확인되지 않은 시신의 신원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독도함에 머물고 있는 천안함 생존 부사관인 허순행 상사와 이광희 중사 등 해군 관계자 및 실종자 가족 등이 인식표, 전투복 명찰 등 여러 소지품을 토대로 이날 수습된 대부분의 시신은 신원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 군 안팎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다른 관계자는 “해저 수온이 3도 정도면 ‘냉장효과’가 발생해 시신이 신원 확인이 가능할 정도로 보존됐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시신에 물에 많이 불어 육안으로 확인이 어렵더라도 소지품 등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15일 천안함 함미 내부에서 발견된 승조원들의 시신이 임시 안치소가 마련된 경기도 평택 해군 2함대 사령부로 운구되고 있다. /연합뉴스